

제4차 RINSA 세미나 결과 보고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3. 4. 28. 금 >

□ 개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 변화와 국제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3 - 4차 RINSA 세미나 결과 보고임.

세미나 개최 현황

- 주 제 :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 변화와 국제법적 대응
- 발표 / 토론 : 연세대 이기범 교수·유민국제법연구소 김민철 소장 (주제발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사회), 배학영·안준형 교수 (토론)
- 일시 / 장소 : 2023. 4. 26.(수) 11:30 ~ 14:00 /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 1세미나실
- 참석 인원 : 해군본부·해양경찰 관계자,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각 센터장 및 연구원, 교내연구자, 학위과정 학생 등 약 50 여 명 참석

□ 주요 토의내용 요약

* 붙임 #1 속기록 참조

【발제 이기범 교수 (연세대)】

- (한중 간 주요 해양법 이슈)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중첩구간이 발생, 명확한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內 심해양식장, 원유시추 등 공세적 행위 자행

“잠정조치수역은 경계 미확정 수역임. 각 국은 상대국의 어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공세적 행위 (Invasive Activities)에 대해서는 자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우리의 대응방안)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원색적·감정적인 대응은 부적절, 중국의 위반 사례를 축적하여 근거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

“모 언론의 과거 보도 시 출처가 불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어도를 뺏길 수 있다며 원색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음. 이런 주장들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국제법을 모르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발제 김민철 소장 (유민국제법연구소) 】

- (동해 해양경계 주장) 우리는 독도와 오키의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하고 상황

“과거에는 약 3해리 정도의 영해만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공해 개념이었으나, 최근에 와서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등이 출현하면서 한·중·일 간 해양 영역에서 잠재적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Joint Development Zone

- (동중국해 7광구와 JDZ) 우리는 1970년 7광구 일대를 우리의 해양영토로 주장하였고, 반발한 일본과의 협의를 의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 공동개발구역 JDZ에 대해 합의 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 중

“모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JDZ의 시한이 2028년이기 때문에, 이후 우리가 7광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JDZ는 어느 측이 종료 통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개념임.”

【 토론 배학영 교수 (국방대) 】

- (정부 차원의 통합된 대응)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국무총리 산하에 해양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준비할 필요

“중국은 JDZ 종료에 대비하여 관련 지역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전략적·체계적·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별도기구를 설립하여 운용할 필요”

【 토론 안준형 교수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 (국제법적 대응 준비)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는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독도를 섬으로 불지, 암석으로 불지에 대해서도 토의 필요

“과거 남중국해 관련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응했던 반면, 우리는 소극적이었음. 또한, 일본이 독도 문제를 확대해서 강제적 절차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준비 필요”

【 토론 이기범 교수 (연세대) 】

- (소극적 대응사례 이유) 역사적으로 한·중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에 판결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의 판단은 늘 국익을 우선시하고 언론·여론의 파장도 신중히 고려

“우리나라는 국제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고 생각함. 학자적인 입장이라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라면 달라질 수 있음.”

【 토론 김민철 소장 (유민국제법연구소) 】

- (독도의 섬 혹은 암석 여부) 독도를 암석으로 규정하면 독도보다 작은 도리시마를 암석으로 규정할 수 있어 동중국해에서 우리의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 단, 국민 정서 상 암석으로 규정 제한 판단

“과거 일본의 독도 수역 측량 이후, 우리는 독도를 섬으로 규정하였고, 섬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음. 하지만, 현 시점에서 독도가 섬인지 아닌지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

【 토론 김정호 중령 (직무연수원) 】

- (해군의 물리적 대응 관련) 해군에 근무 시 중국의 함정들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입하면 비례적 대응을 위해 산둥반도까지 다녀오는 등 물리적 대응을 하였는데, 그 외 방안이 없을지 질의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해양 영토 확보를 위한 명분쌓기로 보임. 중국은 함정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외교부의 침범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라든지 다른 대안들에 대해 토의”

【 토론 박영준 소장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 (일본의 대응사례 참고) 일본은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횟수를 1년에 두 번 정도는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정기적인 공개를 통해 해당국에 경고도 하고 경각심도 갖는 대안 고려